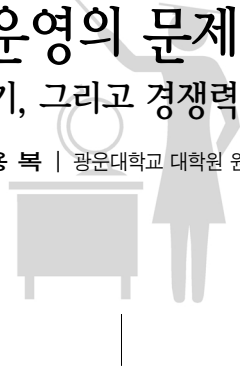


일반대학원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독립성 찾기, 그리고 경쟁력 살 붙이기 -

김 용 복 | 광운대학교 대학원 원장



이 시대와 사회는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상아탑 속의 상아탑이었던 일반대학원 조차도 학문연구라는 소명과 정열의 잣대에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I. 위기로 치달은 우리의 일반대학원

제법 연륜이 쌓여 가는 일반대학원은 '지고',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전문대학원은 '뜨고' 있다. 일반대학원은 충원미달사태를 겪고 있는데, 전문대학원에는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문대학원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진학이 곧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전문인 양성보다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반대학원(특히 박사과정)은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 계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교수로 자리를 얻기란 너무

나 힘든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쯤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시대와 사회는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의 대학은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야 한다. 인력의 수요 공급량이 대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기업과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이 자율성이라는 황금률을 빼앗기고부터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이념도 그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이제 상아탑 속의 상아탑이었던 일반대학원 조차도 학문연구라는 소명과 정열의 잣대에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단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오늘의 세계화와 지역화현상은 경쟁과 연대를 첨예하게 심화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의 성공적인 양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국은 학부수준의 인력으로는 경쟁력을 지닌 국가적 인재를 충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은 일반대학원일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대학원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일 터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고급인력의 양성이란 과제를 우리의 대학원에 맡기기보다는 선진국의 대학원에 맡기는 옆길을 선택해왔다. 정부도 대학당국도 우리의 일반대학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우리의 대학원에서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인재를 배출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나 정책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대학원이 희망의 부재, 미래의 부재, 비전의 부재에 빠져있다는 것일 것이다. 어쩌면 할 일

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처한 처절한 현실이다. 엄청난 양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고, 이 질적 저하가 대학원 교육의 꺾임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대학원 교육의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기초학문이나 인문학에 뜻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그 길은 나락의 길이고 형극의 길이 된지 오래다. 이런 고난이 오늘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다고 말해도 좋을까. 일부의 일이

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이 가능할까.

우리의 교육계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노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교육의 정점에 있어야 하는 일반대학원이 떠맡고 있는 학문적 소명과 책임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학원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Ⅱ . 일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

일반대학원이 안고 있는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대학원 교육이 어떻게 의존적이 되어버렸으며, 독립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확인

우리는 그동안
고급인력의 양성이란 과제를
우리의 대학원에 맡기기보다는
선진국의 대학원에 맡기는
옆길을 선택해왔다.
정부도 대학당국도
우리의 일반대학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우리의 대학원에서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인재를 배출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나 정책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하고,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대학에 없혀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대학원’, 아마도 이것이 일반대학원에 대한 단적인 인식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도 대학의 교육비중도 학부교육에 있었지 대학원 교육에 있지 않았다. 산업화와 경제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고, 대학원도 대학의 성장에 따라 의례적으로 함께 ‘동행’ 할 수 있었다. 대학원 교육의 이니셔티브가 대학원에 있지 아니하고 학부교육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저하현상이 그대로 대학원 교육에도 전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학 교육의 질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여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공적 처방을 선택하기보다는 ‘선진국의’ 대학원에 위탁하는 단기간적 처방으로 모면하여 온 셈이 되어 버렸다. 대학원은 외형상 양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2002년의 일반대학원의 학생수가 1979년의 학부 학생 수에 맞먹고 있다), 질적 저하를 겪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의존성의 심화는 우리의 대학원의 독립적 존립의미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글의 접근 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반대학원이 독립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두려고 한다. 이 글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교육이 개선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학부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초·중등 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게 되리라는 큰 그림의 구

도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미노현상은 초·중등교육의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학부로, 급기야는 대학원으로 번지기에 이르렀다. 도미노현상의 정점에 일반대학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면,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는 다른 교육기관의 정상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인가.

문제 하나. 일반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요컨대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의 위상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고, 외견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반대학원이 지향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의 배출이라는 외형상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신학,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로 학문의 심화과정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간주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학위제도도 정체성의 확립과 연계해서 그 명칭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분류에 맞춰 학위도 학술학위와 전문학위 또는 자격학위로 명칭을 구별하고, 사용상의 혼선을 정리하는 것도 정체성의 확립에 일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문제 둘. 우리의 대학원은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대학원은 그 설립이념이나 지역의 특성, 대학원생의 수준이나 기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대학원들이 교육편제, 학위제도, 전공구분, 교육과정 등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등에서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학원의 교육은 획일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학원이 독립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

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학문적 수월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우수한 대학원들은 과감히 소수정예주의로 나아가야 하고, 기초학문 대학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성화되어야 한다. 뛰어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이란 국가지대본일 것이고, 이러한 중차대한 역

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큰 소명이요 영예일 것이다. 그들은 명실상부하게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특성화함으로써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셋. 대학원의 학과구성에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부에서는 학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부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비슷비슷한 첨단학과를 다같이 증과하여 왔고, 이러한 학부의 증원방법과 운영방법이 그대로 대학원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의 고등교육법은 학부과정을 중심에 두고 대학원과

정은 학부과정의 연장선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학원의 독자성과 독립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의 결여는 대학원의 파행적 학과구성과 유사학과의 방치에 부채질을 한 셈이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원 스스로 유사학과를 통합하는 등 학문의 성격에 충실하도록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그 결과 학문의 심화과정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간주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문제 넷. 일반대학원의 진학률이 저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대학원에는 전임교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은 교육전담교수에 가깝다. 대학원이 학문심화과정으로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

하려면, 대학원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우수한 연구중심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선진 연구시설의 확충이 대학원 교육의 생명이라고 할진대, 연구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선진 연구시설에서 우수한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이러한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약하기 어려운 꿈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열악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를 선망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 다섯.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규제하는 기준이나 제도가 미비하다.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공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치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인원구성이 아니라 적절한 전임교수의 확보기준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과 설비의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선발에서부터 학사운영과 학위수여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사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규제하는 절차와 수준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운영의 기준에 충실한 대학원에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도 다양각색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학문의 특성이나 학생의 교육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학점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심화과정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은 교양-기초-전공이라는 유기적 연계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문의 단계적 교육을 도외시하고 세분화된 전공영역의 학습에 편중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학문의 연계와 체계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학문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회진출 후에도 자질과 인격의 조화를 기약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Ⅲ. 대학원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우리가 일반대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까닭은 어떻게 하면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까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와 대학의 정책 및 의지의 부족에 그 위기의 탓을 돌리고 거기서 처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원이 주도적으로 대학원의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우선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태의연하게 저지르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범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적시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 올바르게 질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대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학원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의 재검토와 재수정 등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종합적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점의 발단과 결과가 어디에 귀속하든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한 실천적 처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은 우리 대학원에서 주도적으로 찾아서 실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원은 이제 더 이상 현란한 변명으로 대학원이 처한 현실을 위장하고 은폐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체를 적시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실천과제들을 찾아내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우리 대학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대학원들이 특성화를 모색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원 상호간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학생 선발제도와 학위수여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연구시설 및 설비의 확충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학원들의 평균화를 지양하고 차별화를 수용하는 의식과 자세가 요청된다. 모든 영역에서 다같이 앞장설 수 없는 것이라면, 특성과 역할, 그리고 학생의 수준 등에 따라 선두가 이끌어주어야 하고 후발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실무인력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목표를 둘 것인가에 따라 대학원의 체계도 차이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칠 것은 찾아서 고쳐나가야 한다. 이렇듯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여기에 맞는 국가의 지원책들이 마땅히 뒤따르게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면 대학원 운영을 개선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어디에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제안 하나. 대학원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교수가 될 수 없고, 취업도 어렵게 되었다.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졸업생들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실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체들은 우수한 인력채용을 외국에 나가서 해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대학원이 배출하는 인력이 국제경쟁력 부족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이유로 사회전반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그 여진으로 대학원을 지망하는 지원자

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학문에 뜻을 두는 일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니다. 학문에 뜻을 둔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학원생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실질적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학부 인재로

**우리 대학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대학원들이 특성화를 모색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원 상호간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는 국가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원에 제도적으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장학금이 시혜 베풀 듯이 지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적·제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생활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비까지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당국자가 없을 터인데, 왜 우리는 차한에 부채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병역의 가능한 특혜를 주어야 하고, 산업체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교육기간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우리의 대학원에서 배출한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공개경쟁을 거쳐 교수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학원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둘. 대학원 교육과 학부 교육은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선진국의 대학원 교육은 선행하는 학부제 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반대학원이 기초학문 대학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교양-기초-전공의 연계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학부 교육이 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에 충실한 편이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우리의 대학원 교육은 학부 교육의 부실 위에 세분화된 전공교육이 겹치고 얹혀져 있는 모양새이다. 이것이 일견해서 우리의 대학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우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옳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학제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바로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자리 잡혀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체이고 태도일 것이다. 우리의 대학원 교육에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을 전공교육의 수준 정도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제간의 학문적 성격과 개념, 그리고 동향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론과 실천, 교육과 연구의 바람직한 결합 모델을 스스로 모

색하게 되는 학문적 성숙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 셋. 기초학문 대학원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한국형 대학원은 어디까지나 교육지책인 감이 없지 않을 수 있다. 기초학문의 성공적인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라고 한다면, 기초학문에 뜻을 둔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과감히 교육재정을 선택적·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부의 정원을 감축하여 소수정예화하고, 학부 교

육이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에 충실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러한 학부교육의 토대 위에서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이 성취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마땅히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여러 대학에서 학문후속세대로서 일자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 넷. 대학원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쟁과 평가 없이는 자발적인 개선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 평가의 주체가 현행처럼 대학교육협의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육기관 평가기구를 새로이 조직하고 그 평가의 일을 떠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대학원 스스로 경쟁을 자청해야 하고 평가를

대체로 국립대학은
인기학과를 가급적 지양하고
기초학문과 인문학문 중심의
들을 견지하도록 해야 하며
사립대학은 응용학문 및
첨단학문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산업체에서 맡아주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정상화와 내실화의 수준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 수준과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기 위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학원 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찍이 어떤 모습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갖고, 대학원에 대한 자체 평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나아가 공공성을 지닌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다면, 우리의 대학원이 오늘과 같은 정체와 공동에 빠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일반대학원들 사이에는 설립, 전통, 성격, 수준, 형편, 수요의 차이 등 큰 편차가 가로 놓여 있다. 국립과 사립의 차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으려니와, 수도권과 지방권의 형편이 서로 다르고, 이른바 명문과 비명문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늘과 땅 사이처럼 공유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편차를 특성으로, 차이를 분담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성취는 클 것이다.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길로 가야한다. 그리고 꺾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초학문 대학원으로 육성하고, 국가가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하여 일류 국가경쟁력을 담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사립 명문들도 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 졸업생들을 대학에서는 교수로 채용해서 사장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국립대학은 인기학과를 가급적 지양하고 기초학문과 인문학문 중심의 틀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응용학문 및 첨단학문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산업체에서 맡아주어야 한다. 지방권에는 중점대학을 건설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서 분석·평가·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길은 치열한 경쟁의 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

김용복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광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저서로는 『철학의 이해』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현상학에 있어서 의미의 문제”, “인식의 전구조”, “언어와 해석”, “철학과 문학의 이음새”, “주체의 해체” 등이 있다.

